

전남 에너지신산업, 중앙아시아 진출 물꼬

김 지사, 우즈베크 에너지위크서
타슈켄트·호레즘 주정부와 협약
태양광·풍력 등 인력·기술교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조이르 미르자예프 타슈켄트 주지사와 '전남도-타슈켄트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가 지역 전략산업인 에너지신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물꼬를 뒀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 5일(현지 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한-우즈베크(KOR-UZB) 에너지위크' 행사에서 타슈켄트, 호레즘 지방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우호 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나즈마딘 사리포프 타슈켄트 부주지사, 무르드 아힐로프 호레즘 부주지사, 자발로프 자흥기르 전자산업협회 부회장, 임청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장, 이상민 코트라 타슈켄트 무역관장, 최태원 전남에너지산업 수출기업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양국 지방정부 간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정책 공유 ▲전남 에너지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 ▲양국 에너지기업·연구기관 간 기술교류와 인력 양성 확대 등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힌 글로벌 수출 길을 지방정부가 주도해 기업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

가받는다. 전남도는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남소재 에너지기업의 수출선 다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이어 개최된 에너지포럼과 수출상담회에는 전남 소재 에너지기업 8개사와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중인 다수의 해외바이어가 참여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국내 최대 8.2 GW(기가와트) 해상풍력을 비롯해 전남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남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고 전남 도내 에너지기업 2개사가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와 보건부에 태양광발전소 3kW급 2개와 10kW급 1개를 기증키로 하는 등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김영록 지사는 에너지위크 기념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인류가 직면한 과제"라며 "양국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전남 에너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전남도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태양광과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전력 생산량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2.5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남지역 에너지기업의 신 실크로드가 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 반대”

목포·무안 도의원들 제동
“균형발전·효율성 저해”

목포·무안 등 전남 서부권 도의원들이 전남도의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다. 동·서부 도의원들 간 갈등 등 조직개편안 통과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하게 됐다.

목포·무안지역 전남도의원들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도가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도청조직 운영의 효율성마저 저버린 개편안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달 19일 기존 1국 6과 154명 규모에서 1본부 3국 1관 11과 320명(공무원 259명·공무직 등 61명) 규모로 확대하는 동부지역본부 조

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목포·무안 도의원들은 “전남도청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으로 경제적 우위를 점한 동부권과 비교해 낙후된 서부권에 행정중심단지를 만들어 동·서간 경제적 균형추를 만들기 위해 무안으로 이전했다”며 “그러나 계획인구 15만명으로 조성한 남악·오룡은 인구 6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채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균형발전의 효과는 미미하고 서부권의 경제력은 갈수록 추락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청이 무안 남악으로 이전하면서 동부권에는 여수해양엑스포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유지를 지원했고 그 결과 현재 동부권은 약 15조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30조원에 가까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전남 도내 경제력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청은 각 분야 중요

추진업무와 관련된 실·국이 함께 모여 정책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정책지원업무 담당 기관이다”며 “정책 조율과 협의의 결과물을 가지고 각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실·국이 분리 운영된다면 이러한 기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과연 전남도에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목포·무안 도의원들은 “지역 이기주의의 시각을 벗어나 진정으로 전남을 위한 길에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전남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외면과 도청조직 운영 효율성을 저버린 전남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직개편안은 20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가결시 7월 정기인사에 반영해 시행된다. /정근산 기자

함평군의회 “군공항 이전 주민 갈등 우려”

함평군의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 여부를 놓고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갈등 양상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7일 함평군의회에 따르면 운영량 의장과 군의원들은 최근 이병용 함평부군수 등 집행부 간부와 간담회를 갖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대응 계획을 보고받았다.

함평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주민 여론조

사를 한 뒤 찬성이 높을 경우 광주 군공항 유지 의향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유지 찬·반 대책위가 여론전을 벌이면서 지역 주민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군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론전과 집회시위, 잘못된 정보 확대·재생산 등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고 함평군의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를 위한 중대한 정책 결정을 위한 사회적 속의 과정이었지만, 집행부가 주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운영량 의장은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만큼 지역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은 실제 군공항 이전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 주민이 미래 함평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군의회와 행정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김대중재단 광주·전남 발기인대회 성료

권노갑·문화상 등 3천명 참여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정치적 고향인 광주에서 김대중재단 광주·전남 발기인대회가 7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발기인으로 각계각층 3,241명이 참여했고, 대회장에는 1,000여명의 발기인이 참석했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화상 전 국회의장, 김태광 전 국회 사무총장,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등 중앙재단의 임원들이 여러명 참석했다.

지역에서는 김정길 6·15공동선언남

측대표, 박만규 전 흥사단 이사장, 이철우 전 광주YMCA 이사장,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이명자 전 오월여미니집 관장, 김재형 전 조선훈총대행, 김승원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재야·시민단체 대표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이영권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 선출직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12개의 장애인단체 간부 100여명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재단 설립을 총괄해온 최경주 이사장은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 위기, 남북 평화 위기 등 난국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

고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김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여 재단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준비위원장인 정구선 전 광주NGO재단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한 뒤 “다음달 18일 광주·전남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김대중정신 계승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지부는 내년 1월 6일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비롯, 김대중정치학교, 김대중 청년아카데미 운영, 김대중사상 연구, 봉사활동, 무등산 전국 등반대회, 추모음악제, 역사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 다. /길용현 기자

전남도의회, ‘전라도 천년사’ 폐기 촉구

“심각한 역사 오류”

전남도의회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전라도 천년사’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전라도 천년사 34권의 e북 전문을 보면 말문이 턱하고 막힌다”며 “아마토 왜가 전라도를 침략해 나라를 세웠다는 일본서기를 인용해 남원을 기문, 장수·고령을 반파, 강진·해남을 침미다려, 구

례·순천을 사타라는 임나 지명으로 기술해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 전라도민이 즐기게 주장해 온 공개토론이나 학술토론 등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정되었던 봉정식 취소와 함께 사·도민에게 사전 공개 후 검증에 대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43권의 방대한 분량을 단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서 이메일

로 받은 후 편찬위 자체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정신과 역사 의식이 투철한 전남도민을 우롱하고 모욕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교육위원장은 “고대사 기술 과정에서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왜곡해 우리의 기초적 역사관을 통째로 왜곡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일본 극우 사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백제 근초고왕이 아마토 왜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내용을 인용한다는 것은 이의신청을 떠나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근산 기자

Gwangju Democracy Forum 2023

광주민주포럼

2023. 5. 14. (일) - 19. (목)

민주주의와 인권옹호자를 위한 연대

- 1 국가폭력과 피해자 권리회복 - 어떻게 이루어지나?
-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6+ - 평화,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
- 3 인권옹호자를 향한 도전과 과제

장소 5·18기념문화센터 (* 2023 광주청년민주포럼 : 5·18교육관)

웹사이트 2023gdf.518.org

문의 062-360-0533 | 5·18글로벌센터

주최 주관 5·18기념재단
후원 GJTO 광주인권재단